

Newsletter

April 2026

Contents

Audit

-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공개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입법예고
- 20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Accounting

-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 2026년 3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발표

Tax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일부 세법 개정안 등 국회 의결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026년 1,2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 1.9% 경제 전망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29일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2026년 중 상장회사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 (부실기업 퇴출) 고위험군 집중 감시와 엄정 감리를 통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
- (감리인프라 혁신) 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증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 (효율적 수행) 과징금 부과권한 조정과 불공정 거래·회계부정 대응 공조 강화

②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 (제재 수용성 제고) 방어권 강화와 위반동기 판단기준 구체화 추진
-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개선 및 회계이슈(테마) 신속점검 실시
- (스마트 감리) 新감리시스템 활용 및 감리지적사례 등 오픈 API 개방

③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 (효과성 제고) 위험수준 기반 감리대상 선정 및 부실 감사 엄정 제재
- (감사품질 경영 조성)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 의무화 및 공시항목 확대
- (품질관리 역량 강화)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추진하여 역량 강화 유도

✓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 170사,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

[더 알아보기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구체화하고,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시장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시장퇴출]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제한 추진
- [감독강화] 저가수주(덤핑)로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경우 감사인 교체 등 감독 강화
- [사각지대] 최대주주 빈번 변경 또는 횡령 발생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 확대
-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에 지정감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정방식 개편 추진
- [거버넌스] 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건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더 알아보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 지급 예정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최대 30%)
 -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어디에 신고하든지' 포상금 지급

[더 알아보기 →](#)

20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26일 '25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42,891사, 지정회사는 1,971사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25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2,891사로 전년(42,118사) 대비 773사 증가(1.8% ↑)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5년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수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 증가(6.0% ↑)
 - 주기적 지정은 전년과 유사(△5사, 0.9% ↓)하였으나, 직권 지정은 전년 대비 증가(+117사, 8.8% ↑)
-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61사) 및 지정비율(34.9%)은 전년(970사, 35.9%) 대비 소폭 감소

[더 알아보기 →](#)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25년 12월 K-IFRS(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K-IFRS 제1118호 적용 영향의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

2026년 3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K-IFRS 정규 질의회신 1건,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1건).

■ K-IFRS 정규 질의회신(1건)

-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 초인플레이션 경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평가(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더 알아보기 ③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

'26년 2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요건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정 평가와 자산손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시총)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매반기)하여 '26년 7월 150억원→200억원, '27년 1월 200억원→300억원으로 강화
-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증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더 알아보기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재정경제부는 '26.1.16. 발표한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부 수정하였으며, 해당 내용과 '26.2.13.부터 입법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2.27.에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일부 세법 개정안 등 국회 의결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6.3.17.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1년 한시) - 매도 시점별 공제율 : (~5.31) 100%, (~7.31) 80%, (~12.31) 50%
-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1년 한시)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1년 한시)
-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단계적 인상 - (총전) 8세 이상의 자녀 → (개정) 2026년~2030년까지 9세~13세까지 단계적 인상

[더 알아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공인회계사가 본 2026년 1,2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회계정책연구원은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한 2026년 1분기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1분기 BSI(현황): 118 (전분기 대비 17p 상승, 경기 개선 국면 진입)
- 2분기 BSI(전망): 118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 확산)
- 경기 개선의 주요 원인
 -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Value-up)에 따른 기업 자산 가치 상승
 - 반도체 및 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전 산업 생산성 향상 기대
- 산업별 현황 BSI
 - 전자(147), 조선(143)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 등 대부분 산업이 기준치(100) 상회
 - 섬유·의류(76), 건설(87), 석유화학(93), 철강(93)은 구조적 약세
 - 2분기 전망에서는 철강(109), 석유화학(102) 등도 기준치 상회로 전환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정부정책 변화, 원자재 가격, Inflation, 통화정책, 자금 조달 환경 변화 등
- 리스크 요인
 - 중동발 에너지·물류 비용 충격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가능성

[더 알아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 1.9% 경제 전망

KDI는 최근 발표에서 2026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소비 회복세로 2025년(1.0%)보다 높은 1.9%로 전망했습니다.

- 주요 전망 수치
 - 실질 GDP +1.9%, 민간소비 +1.7%, 설비투자 +2.4% 등 증가
 - 수출 증가율 2.1% 및 경상수지 약 1,500억 달러 흑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 취업자 수 증가 17만 명
- 전망 배경
 -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나,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호조가 이를 보완하며 완만한 증가세 유지
 - 금리 인하와 실질소득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과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
- 주요 리스크 요인
 - 미국 관세 정책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지속 및 환율 상승 시 물가 상방압력 확대 가능성
 - 건설투자 회복 지연 및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부진

[더 알아보기 →](#)

Contact us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